

IMF 경제위기와 농촌주민의 삶의 질 변화

송정기* · 박재규**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

IMF Economic Crisis and the Change of the Quality of Life of Rural Residents

Jeong-Key Song* · Chae-Kyu Park**

*Sociology ·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Chonbuk National University

적 요

본 연구는 1997년 후반부터 시작된 한국의 경제위기 하에서 농촌주민들이 일상생활(삶의 질)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경험적인 자료분석을 통해 검토하였고, 이를 토대로 농촌지역사회 발전과 농촌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몇 가지 대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자료분석 결과에 의하면, 삶의 질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7가지 영역 가운데 '지역사회 참여' 부문만이 유일하게 과거보다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을 뿐 나머지 6개 영역 모두에서 농촌주민들의 주관적 평가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영역 가운데 사회적 형평성 인식이 가장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고, 그 다음으로 경제생활, 여가생활 그리고 직업생활 및 국가(사회)신뢰 영역이었다. 마지막으로 가족생활은 다소 악화되긴 했지만 다른 영역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았다.

분석결과에서 드러났듯이, 농촌주민의 사회적 형평성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었는데 이는 바로 그동안 한국경제 발전과정에서 농촌지역의 전략적 배제와 IMF 경제위기 하에서 농촌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부족했다는 구조적 문제를 반영한 것으로 사려된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는 농촌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2단계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또한 농가소득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동시에 농촌경제를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직접지불제도의 조기 도입, 농업재해 보상제도 강화, 농축산물 가격 대책 수립, 그리고 유통구조의 개혁 등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는 농업의 경제 외적 가치인 '식량안보'와 공익적 기능을 고려하여 농업을 안정화·활성화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농촌경제 회생정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I. 서론

1. 연구목적

1997년 후반 태국 바트화 폭락에서 비롯된 태국의 외환위기는 그 파급효과가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

었고, 그 여파로 한국경제는 1997년 말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였다. 이른바 'IMF 경제위기'는 기업도산과 대량실직, 물가불안, 소득불균형 심화, 그리고 사회균열 확산 등과 같은 사회적 위기로 발전하면서 국민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IMF 경제 위기는 분명 우리사회 전역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쳤지만, 그 부정적 영향은 특히 농민, 노동자, 그리

고 저소득층(빈민)과 같은 우리사회의 소외계층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박재규, 1999). 왜냐하면 이들 소외계층은 IMF 경제위기와 같은 외부적 충격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충격에 직면하여 이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물적·인적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이다(김영기·박재규, 2000).

본 연구는 IMF 경제위기하에서 농촌주민들의 삶의 질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IMF 경제위기는 한국 농촌경제와 농촌주민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농촌사회의 구조적 취약성과 1980년대 후반부터 급변하기 시작한 국제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즉, 1960년대 이후 한국의 산업화 과정은 농촌지역을 배제시켜 농촌의 산업기반과 구조를 취약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농촌지역은 외부의 작은 충격에도 심각한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1960년대 이후 도시지역의 자본투자와 산업시설의 집중을 축으로 하는 한국의 산업화는 농촌인구의 도시로의 이동을 촉진시켜 농촌지역의 인구과소 현상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시-농촌 간의 불균형 발전을 심화시켜 왔다. 농촌인구의 도시로의 이주에 따른 농업노동력의 절대적 감소, 청·장년층의 도시이주에 따른 농업노동력의 노령화, 부녀화 현상, 농업 후계자의 부족, 그리고 최근 소작농의 증가는 농업기반의 취약성과 저발전현을 더욱 심화시켰다(윤종주, 1974; 윤근섭·김영기, 1990; 윤근섭·송정기, 1994).

이처럼 취약한 산업기반과 저발전 상태에 놓여 있던 농촌지역은 최근 국제적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함에 따라 심각한 타격을 받은 바 있다. 즉, 1990년대 초반 UR 협상의 타결에 따른 세계무역체제(WTO) 출범과 1995년 한국의 OECD 가입은 농산물 수입 자유화를 촉발시켜 값싼 농산물의 대량 유입이 가능하게 되었고, 그 결과 한국 농산물 가격 경쟁력은 크게 약화되면서 국내 시장에서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이런 부정적 결과는 또한 탈농현상을 가속화시켜 농업뿐만 아니라 농촌사회의 존립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김동일·라선영, 1994).

국내외적 환경변화 속에서 피폐화된 농촌지역은 1997년 후반부터 시작된 'IMF 경제위기'로 그 존립기반과 농촌주민들의 삶의 현상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농촌경제와 농촌주민의 일상생활은 환율폭등에 따른 연료, 비료, 농약, 사료 등의 원자재비 급상승, 투매와 농축산물 소비감소에 따른 가격 폭락, 그리고 정부 당국의 일관성 없는 농정 등으로 매우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러한 심각성을 고려한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 당국이 농촌경제의 몰락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농사포기에 따른 농가 파산사태가 잇따라 결국 농촌지역은 회생불능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였다.

IMF 경제위기 이전부터 한국 농촌사회는 그 기반이 매우 취약하였기 때문에 외부의 조그마한 충격에도 매우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는 구조적 약점을 갖고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IMF 경제위기'로 지칭된 한국의 경제위기는 어느 다른 집단보다도 농촌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상처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IMF 경제위기'가 농촌주민의 삶의 질에 미치게 될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농촌주민의 삶의 질 변화와 관련된 체계적인 연구가 그동안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현재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IMF 경제위기(1997~1999) 동안 농촌주민들의 삶의 질의 여러 영역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경험조사를 통해 밝혀보고자 한다. 또한 이상의 경험적 조사결과를 토대로 농촌주민의 삶의 질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1960년 이후 한국사회의 산업화 과정과 1980년대 후반 이후 국제적 환경변화 하에서 극도로 취약해진 농촌사회가 'IMF 경제위기'와 같은 외부적 충격으로부터 얼마나 심각한 타격을 받았는지 농촌주민의 '삶의 질'(quality of life) 변화를 통하여 검토하며, 그 분석결과를 토대로 농촌사회의 저발전 실상을 부각시키면서 동시에 농촌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차적으로 경제위기와 삶의 질 변화에 관한 기존 문헌을 검토하였고, 이를 토대로 '삶의 질' 본질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즉 경제위기 하에서 삶의 질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 구성과 함께 분석방법을 설정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 '삶의 질'은 농촌주민생활의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심리 상태 모두를 망라하는 종합적인 개념(임희섭, 1996)으로 사용하였고, 그 중에서도 농촌주민의 주관적 평가에 보다 초점을 두고 삶의 질 변화를 측정하였다. 좀더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농촌주민의 삶의 질 영역으로 주민들의 직업생활, 가족생활, 경제생활, 여가생활, 지역사회활동 참여, 사회적 형평성 인식, 그리고 국가신뢰 등 7가지로 설정하였다. 농촌주민의 일상생활을 구성한 7개 영역 각각은 3~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각 문항은 1997년 12월부터 1999년 12월 조사 시점까지 2년에 걸쳐 있었던 변화를 응답자의 주관적 평가에 의해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2년간의 변화를 5점 서열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지만, 분석의 편의상 3점 서열척도로 재구성하여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IMF 경제위기 하에서 농촌주민의 삶의 질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 두 시점의 설정이 필요한데, 첫번째 시점은 'IMF' 경제위기가 가시화되기 이전인 1997년 중반으로 설정하였고, 두번째 시점은 1999년 후반으로 설정하였다. 다시 말해서, 본 연구는 'IMF 시대'를 사회적 사건으로 간주하고, 지난 2년 동안 농촌주민의 삶의 질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비교론적 관점에서 질문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는 2000년 1월 10일부터 1월 23일까지 약 2주에 걸쳐 수집되었으며, 조사지역은 전라북도 완주군 농업기술개발센터의 도움을 받아 시설농가 입지의 특수성과 전업농가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25개 마을을 선정하였고, 각 마을에서 10~15가구씩 무작위 표집을 통해 가구주를 대상으로 질문지를 사용하여 면접하였다. 그리고 가구주를 만나기 어려운 경우는 배우자 및 성인 가구원을 대상으로 면접하였다. 본 연구의 최종 분석에 사용된 표본 수는 전체 300가구였다.

II. 경제위기와 삶의 질에 관한 문헌검토

1. 삶의 질에 관한 문헌검토

삶의 질에 대한 개념 정의가 최근까지 명확하게 정립되지 못한데는 삶의 질에 관한 연구가 실용적인 목적하에서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이라는 용어가 함축하고 있는 모호/애매성 때문이다(이현송, 1997). 서구에서 시작된 삶의 질 연구는 사회구성원들의 생활여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올바른 사회정책을 수립하여 바람직한 사회 발전을 모색하려는 실용적인 차원에서 시작되었다. 그 결과 삶의 질 개념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이론적 논의가 뒤따르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진행되어 온 삶의 질 연구에서 발견되는 가장 일반적인 내용은 '개인 생활의 전반적인 수준'이나 '복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간생활의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수준, 그리고 가치의식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삶의 질이란 경제적 생활수준, 교육성취, 심리적/주관적 만족, 생활만족, 행복감, 주관적 복지 등을 의미한다. 이처럼 '삶의 질'이란 인간생활의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심리상태 모두를 망라하는 종합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임희섭, 1996).

삶의 질과 관련된 초기 연구는 인간생활의 주관적 차원을 무시하고 객관적인 차원에만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삶의 질에 관한 초보적인 시도는, 1920년대 미국에서 일부 사회과학자들이 사회변동의 양적 결과인 사회지표(social indicators)를 개발하려는 노력에서 찾아 볼 수 있듯이,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양적인 차원만을 중시하였다. 그후 다른 나라들도 이러한 연구방법을 도입하여 사회-경제적 변동을 측정하는데 사용하였으며, 특히 국제기구(UN)와 국가간 비교 연구는 경제발전의 정도를 비교하기 위한 도구로 사회지표를 폭넓게 활용하면서 더욱 발전하였다(Nan Lin, 1991). 그러나 객관적인 차원에 초점을 둔 삶의 질 연구는 1960년대 의문이 제기되면서 새로운 발전 계기를 맞이하였다.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된 경제적 호황에도 불구하고, 빈곤문제, 범죄문제,

도시문제, 환경과피 등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사라지지 않는데 대한 반성과 더불어 사회구성원 전체의 종합적인 삶의 수준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Bauer, 1966). 또한 양적인 경제성장이 자동적으로 개인의 삶에 대한 만족을 증대시킬 것이라는 당시의 지배적인 진화론/근대화론적 가정에 대한 회의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환은 또한 인간의 삶의 질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이를 국가개입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 사회정책에 반영시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윤택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도하려는 실천적인 관심에서 출발하였다(Baldwin, et al., 1990; Nan Lin, 1991).

이런 인식 전환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대다수 연구들은 삶의 질을 객관적인 차원과 주관적인 차원 가운데 그 어떤 하나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다(Inkeles, 1993). 먼저 인간의 삶의 질 가운데 객관적인 차원에 초점을 둔 연구는 관찰 대상자의 주관적 느낌이나 평가와 관계없이 외부 관찰자에 의해 측정 가능한 지표들의 분석에 집중되었다. 이러한 객관적 지표들은 일반적으로 평균수입, 교육수준, 유아사망률, 그리고 환자당 의사수 등과 같은 명확한 물리적 지표들과 교회 및 자발적 결사체 참여와 같은 사회·문화·정치적 상황을 반영하는 빈도 지표들로 구성된다. 다른 한편, 주관적 차원의 지표들은 사람들에게 자신들과 주변 사람들의 상태에 대한 평가, 믿음 등을 물어봄으로써 측정하였다. 삶의 질을 구성하는 주관적인 차원의 내용은 인간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노동(일), 결혼, 가족생활, 교제, 건강, 주거, 여가, 공동체, 국가 등에 대한 주관적 평가 내지 만족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이와 같이 인간생활의 객관적 차원과 주관적 차원이 분리된 채 삶의 질 연구가 진행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삶의 질에 관한 객관적 차원과 주관적 차원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였을 뿐만 아니라 삶의 질에 대한 단일 차원적인 척도구성이 어렵다는 사실 때문이다. 예를 들면, 데이비스와 화인-데이비스(Davis and Fine-Davis, 1991)에 의한 도시 거주자들의 삶의 질 조사에 의하면, 도시의 객관적 조건과 그

주민들이 인식하는 복지 사이에는 어떤 일관된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들 연구가 시사하는 중요한 제안은 바로 삶의 질 문제는 그것의 객관적 차원을 높인다고 해서 반드시 주관적 만족도가 상승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삶의 질에 관한 객관적 차원과 주관적 차원의 불일치성에도 불구하고, 단일차원적 척도의 구성에 대한 노력은 계속되어 왔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는 단순히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객관적인 차원과 함께 삶의 세부 영역들에 대한 사람들의 만족도, 공동체의 질서에 대한 인식, 일과 여가에 대한 평가 등 사회 구성원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질적인 실체를 동시에 이해하지 않고는 정확한 평가라고 볼 수 없다는 반성 때문이다(전병관·박준식, 1995; 1991; Inkeles, 1993).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작업이 최근 시도되었는데, 예를 들면, 에반스는 기존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들을 분석하면서 상호간에 통계적으로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판명된 8가지 영역으로 삶의 질 척도를 구성하였다. 에반스의 연구는 삶의 조건으로서 객관적인 지표들과 인지된 평가로서의 주관적인 지표들의 관계를 개념적/이론적으로 체계화시키는 작업이었다(Evans, 1994).¹⁾ 그런 의미에서 에반스의 연구는 오늘날 삶의 질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왜냐하면 에반스의 연구는 그 동안 삶의 질에 대한 연구에서 괴리되어 왔던 객관적 차원과 주관적 차원을 접목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적 실마리를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에서 '삶의 질'에 관한 초보적인 연구는 1970년대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추진된 한국의 '사회지표'(social indicator)의 개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의 연구는 학술적 차원보다 경제개발 전략의 수립을 위한 기초 작업의 일환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경제성장에 따른 경제·사회·정치영역에 대한 수량적 지표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작업은 국민들이 경험하는 삶의 질과 상당한 거리가 있었고, 또한 다분히 정치·경제적 목적하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뢰성의 문제를 수반하였다. 특히 정부가 발표하는 객관적인 사회지표와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실

제적인 삶의 질 간에 커다란 괴리감이 나타남에 따라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려는 노력들이 학계를 중심으로 대두되었다(윤종주, 1983; 한국개발연구원, 1987).

이런 연구지향은 실용적·학문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작업이었고, 또한 삶의 질을 보다 정확하게 인식하는데 초보적인 토대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 더욱이 이들 연구들은 한국사회의 삶의 질 문제(건강, 안전, 주택, 환경, 교육, 평등성 등)에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 사회적 인식전환과 함께 정부도 국민의 삶의 질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기존의 경제정책의 근간이었던 '성장 중심주의'로부터 '질을 중시한 경제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은 몇 가지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먼저 이들 연구는 인간의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만족도를 사용한 단일적도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그런 작업을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아직까지 객관적 사회·경제·문화지표와 주관적 만족도를 함께 사용한 삶의 질 척도는 구성되지 못했다. 이들 연구 또한 한국사회의 불평등현상이나 특정 현상과의 관계 속에서 진행되기보다는 하나의 독립된 현상으로 또는 총체적인 현상과악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송복 외, 1995; 이은진, 1996).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에반스의 연구를 참고로 삶의 질에 관한 이론화를 시도한 임희섭(1996)의 모델을 토대로 삶의 질 영역을 재구성하였다. 다시 말해서, 본 연구는 IMF 경제위기 상황이 한국 농촌주민의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리고 그 효과를 측정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를 고려하여 삶의 질 영역을 7개로 재구성하여 조사하였다.

2. 사회변동과 삶의 질 변화

기존의 삶의 질 연구는 개인이나 집단의 사회-경제적 생활수준의 파악, 개인이나 집단간의 삶의 질 차이 이해, 또는 삶의 질 척도구성에 관한 논의에 집

중되었다. 그 결과 아직까지 사회변동이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관한 일반적인 연구모델은 정교하게 발전하지 못했다. 물론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시도된 초보적인 연구로는 산업화/근대화 와 삶의 질간의 관계를 조사한 인켈스(Inkeles, 1993)의 연구가 있다. 그는 단순히 현재 상태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근대화/산업화가 과연 개인의 삶의 질을 어느 정도 향상시켜 주고 있는지 그 변화를 검토하였다. 산업화와 삶의 질간의 관계를 인과적으로 설명하면서 인켈스는 주변부 국가의 사람들이 더 많은 박탈감과 삶의 중압감에 시달린다는 켈럽의 조사결과를 인용하였다. 인켈스의 연구는 사회발전의 정도에 따라 개인의 삶의 질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목적인 'IMF 사태'와 농촌주민의 삶의 질 변화간의 분석틀 구성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왜냐하면 인켈스의 분석방향과 반대로 경제위기로 요약되는 IMF 상황은 분명 한국인의 삶의 질 수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박재규, 1999). 여기에 본 연구는 'IMF 사태'와 농촌주민의 삶의 질 변화간의 분석모델을 구성하기 위해 뒤르켐(Durkheim, 1951)과 에릭슨(Erikson, 1976)의 개인과 지역공동체 해체에 관한 경험연구를 검토하였다.

뒤르켐의 고전적 자살연구에 의하면(1951), 개인의 해체는 사회적 통합과 사회적 규제력의 유무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 예를 들면, 경제적 침체에 따라 갑작스럽게 하강이동을 경험한 사람들은 삶에 있어서 일종의 무규범 상태를 경험하여 일탈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까지 자신이 속해 있던 집단에 의해 지지되어 오던 도덕적 확신과 관습적인 기대를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하강이동뿐만 아니라 갑작스런 부의 획득에 의한 상승이동 또한 무규범(아노미) 상태를 초래한다고 한다(Coser, 1971).

개인생활의 변화 및 해체에 관한 보다 실증적인 사례는 에릭슨의 버팔로 계곡 댐 붕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예기치 못한 댐의 붕괴에 따른 대홍수는 지역공동체의 많은 공간을 파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커다란 상처를 남겼다. 에릭슨은 주민들

이 입은 상처를 개인적 상처와 집합적 상처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대흥수 속에서 살아 남은 사람들은 가족, 친족, 이웃 등의 죽음과 공동체의 파괴 경험으로부터 심각한 충격을 받았고, 또한 자신들만 살아 남은 것에 대한 죄의식으로 고통을 받았다. 결국 그들은 심각한 물질적 손해와 정신적/감정적 해체와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개인적 상처를 경험하였다. 다음으로 집합적인 상처란 바로 주민들이 그동안 긴밀하게 유대관계를 맺고 참여하던 지역공동체로부터 유리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버팔로 계곡 거주자들은 대흥수가 지역공동체를 파괴하기 전까지 가족, 친척, 그리고 이웃간에 강한 연대감을 유지하였는데, 그것은 토니스(Tonnies)의 '공동사회', 쿨리(Cooley)의 '일차집단', 그리고 갠즈(Gans)의 '인간-지향적' 관계 개념과 매우 흡사했다고 한다(Erikson, 1967). 그러나 지역공동체의 파괴는 생존자들의 고통을 완충시켜 줄 수 있는, 그들에게 친밀한 상황/맥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도덕성을 상징적으로 대변해 줄 수 있는 중간 매개체의 상실을 의미한다. 특히 생존자들은 지역공동체의 파괴로 사회와 국가에 대한 신뢰감을 상실하였고, 그 결과 정신적 혼란과 심각한 외로움에 빠졌으며, 또한 자신의 정체성과 사회에 대한 안전의식마저 상실하게 되었다. 그들은 이제 자기가 거주한 공간이 더 이상 안전한 장소가 아니라 불신감을 갖게 되었으며, 자신을 제외한 어느 누구에게도 의존할 수 없다는 사회에 대한 신뢰감마저 상실하였다고 한다(Erikson, 1967).

이상과 같이 급격한 사회변동은 개인의 일상생활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IMF 경제위기'라는 한국사회의 총체적 위기상황이 농촌주민의 일상생활(삶의 질), 즉 직업생활, 가족생활, 경제생활, 여가생활, 지역사회활동 참여, 사회

적 형평성 인식, 그리고 국가(사회)신뢰 등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경험적 자료를 통해 분석하였다.

III. 자료분석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표 1에 의하면, 조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51세로 농촌지역의 노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60세가 넘는 비율이 26.7%로 한국사회 전체의 9.1%(1995년 기준)에 비해 약 3배 가량 많아 농촌지역의 고령화 현상이 어느 정도 심각하게 진행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김태현·정환영, 1999). 이처럼 농촌주민의 고령화 현상은 그들의 교육수준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났다. 즉 전체 응답자의 평균 교육 수준은 9.47년으로 평균 중학교 교육을 약간 상회하였다. 그러나 전체 응답자 가운데 초등학교 이하의 교육밖에 받지 않은 농촌주민들도 무려 30.4%로 매우 높았던 반면, 고등교육(초대졸 이상)을 받은 사람은 단지 5.5%에 불과하였다.

1999년도 농촌주민들의 연간 가족소득(조소득)은 1,785만원으로 적은 것은 아니었지만,²⁾ 농촌주민의 금융기관 부채액(사채 포함)과 이웃 및 가족·친지의 대출에 연대보증을 선 보증액은 상대적으로 매우 많았다. 즉, 1999년도 현재 농촌주민의 평균 부채총액과 보증액은 각각 약 3,700만원과 약 4,500만원으로 연간 평균 가족소득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이와 같이 농촌주민의 가족소득에 비해 부채와 보증액이 너무 지나치게 많다는 조사결과는 오늘날 우리 농촌사회가 직면한 부채문제와 보증문제의 심각성을 반증해 준다.

다른 한편, 1997~99년 동안 사회계층의 변화를 농촌주민의 주관적 계층의식에 의해서 살펴보면 표 2

표 1. 조사대상자의 특성

변 수 (단위: 세)	연 령 (단위: 년)	교육수준 (단위: 만원)	연간 가족소득 (단위: 만원)	1999년 보증액 (단위: 만원)	1999년 부채액 (단위: 만원)
평균값	51.47	9.47	1,785	4,495	3,743

와 같다. 먼저 전체 응답자 가운데 1997년도에 상류층에 속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7.1%인데, IMF 경제위기 이후 3.4%까지 줄어 지난 2년 동안 상류층의 절반 이상이 하강이동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사회계층 비율의 변화는 중류층과 하류층에서 보다 뚜렷하게 진행되었는데, 전체 응답자 가운데 1997년도에 중류층에 속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과반수 이상(61.1%)을 차지하였다. 이와 같이 IMF 경제위기 이전에 농촌지역에서 중류층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한국사회가 IMF 경제위기 이전까지 비교적 안정된 사회구조를 갖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경제위기 이후 2년이 지난 1999년에 그 비율은 38.9%로 크게 줄어들어 한국사회의 '중산층 붕괴'에 관한 그동안의 주장이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었음을 반증해 준다. 중산층의 감소와 달리 하류층은 IMF 경제위기 이전인 1997년에 31.8%에서 1999년 57.7%로 증가하여 지난 2년 동안 무려 25.9%나 증가하였다. 이처럼 한국 농촌지역은 IMF 경제위기 이후 사회적 안전판 역할을 해왔던 중산층이 급격히 몰락하여 하류층에 흡수되면서 상당히 불안정한 계층구조를 갖게 되었다.

2. 농촌주민의 삶의 질 변화에 대한 분석

본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은 1997년 후반 시작된 한국의 IMF 경제위기가 지난 2년 동안 농촌지역 주민 생활에 어떤 변화를 초래하였는지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농촌주민의 일상생활을 ① 직업생활 만족도, ② 가족생활 만족도, ③ 경제생활 만족도, ④ 여가생활 만족도, ⑤ 지역사회활동 참여도, ⑥ 사회적 형평성 인식, ⑦ 국가신뢰 영역으로 구분하여 그 변화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직업생활 만족도 변화

삶의 질 영역 가운데 직업생활 만족도 변화는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농사)에 대한 만족감이 지난 2년 동안 어떻게 변하였으며, 그 일을 하고 싶은 동기와 그 작업 결과로 나타난 보상 수준에 각각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측정하였고, 그 분석결과는 표 3과 같다. 따라서 직업생활 만족도 평가는 그동안 여러 가지 사회변화 속에서도 한국농촌(혹은 농업)을 지키며 살아왔던 농촌주민의 직업(농업)관에 대한 변화와 한국농촌의 미래 전망, 그리고 IMF 경제위기가 농촌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먼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농촌주민들이 경험한 농사일에 대한 만족감 변화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가운데 45.1%는 일에 대한 만족감이 줄어들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농사일에 대한 만족감이 증가한 사람은 단지 16.7%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응답자 가운데 38.5%는 과거와 비슷한 만족감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한국의 경제위기 이후 농촌주민들의 농사일에 대한 만족감은 증가한 사람보다 감소한 사람이 약 3배 가량 많았는데, 이는 바로 IMF 경제위기로부터 한국농촌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심각한 타격을 받았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앞으로 농사일을 하고 싶은 동기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검토하였는데, 그 결과는 농사일에 대한 만족도 변화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즉 농사일을 계속해서 하고 싶은 동기가 증가하였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 가운데 18.0%에 불과한 반면, 줄어들었다고 응답한 사람은 42.2%로 전자보다 약 3배 가량 많았다. 그리고 IMF 경제위기 이전과 비슷한 수준에서 농사일을 하고 싶은 동기를 갖고 있는

표 2. 조사대상자의 사회계층 변화(1997~1999)

년도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	
	빈도(N)	비율(%)	빈도(N)	비율(%)	빈도(N)	비율(%)
1997년	19	7.1	163	61.1	85	31.8
1999년	9	3.4	104	38.9	154	57.7

사람은 39.8%였다.

마지막으로 IMF 경제위기 이후 농업이란 '직업활동'을 통해 농업인이 어느 정도 적당한 보상을 받고 있는지 검토하였는데, 그 결과는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 응답자 가운데 과반수 이상인 54.2%는 경제위기 이후 농업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더욱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반면, 응답자의 15.8%만이 농업에 대한 보상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여 큰 대조를 이루었다. 그리고 나머지 30.1%는 농업에 대한 보상이 경제위기 이전과 비슷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상과 같이 전체 응답자 가운데 약 50% 정도가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자신이 종사해 왔던 농업으로부터 만족보다는 불만을 강하게 느꼈다고 응답한 반면, 약 15% 정도만이 이전보다 직업생활 만족감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경제위기 이후 농촌주민의 직업생활 만족도가 증가한 사람보다 줄어든 사람이 약 3배 가량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바로 'IMF 경제위기'라는 외적 충격이 그 동안 취약한 사회·경제적 구조를 갖고 있던 농촌사회에 보다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는 그동안의 논의와 우리의 가정을 지지해 준다.

2) 가족생활 만족도 변화

농촌주민의 가족생활 만족도 변화를 측정하는데 본 연구는 IMF 경제위기 이전에 비해 1999년 12월 현재 부부생활 만족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그리

고 자녀-부모간의 상호방문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사용하였고, 그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먼저 부부생활 만족도 변화에서 전체 응답자 가운데 22.2%는 2년 전에 비해 그 만족감이 줄어들었다고 응답한 반면, 15.6%는 만족감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과반수 이상인 62.2%는 IMF 경제위기 이전과 현재 생활 사이에 커다란 변화가 없었다고 응답하였다. 비록 IMF 경제위기라는 외적 충격이 일부 농촌주민의 부부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만, 그 심각성은 크지 않았다. 예를 들면, 부부생활 만족감이 크게 감소하였다고 응답한 사람은 5.8%인데 비해, 약간 감소하였다고 응답한 사람은 16.4%로 3배 가량 많았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위기라는 외적 충격 속에서도 농촌주민의 부부생활은 크게 악화되지 않았는데, 이런 결과는 농촌지역의 생산활동 및 소비활동이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생활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인 듯 하다.

그러나 부부생활 만족도 변화에 비해, 부모-자녀간의 상호방문은 IMF 경제위기로부터 더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자녀의 부모방문 정도에서 그 빈도가 줄어들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 가운데 25.2%인 반면, 증가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14.9%로 양자간의 차이는 약 10%에 달했다. 그리고 경제위기 이전과 비슷한 수준에서 자녀의 방문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59.9%로 매우 높았다. 다른 한편, 부모가 자녀를 방문한 결과는 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부모의 자녀 방문이 IMF

표 3. 농촌주민의 직업(농사일)생활 만족도 변화에 대한 평가

변 수	평가		증가하였다		비슷하다		감소하였다		합 계	
	빈도(N)	비율(%)	빈도(N)	비율(%)	빈도(N)	비율(%)	빈도(N)	비율(%)	빈도(N)	비율(%)
농사일에 대한 만족도 변화	49	16.4	115	38.5	135	45.1	299	100.0		
농사일을 하고 싶은 동기 변화	53	18.0	117	39.8	124	42.2	294	100.0		
농사일에 따른 보상만족도 변화	47	15.8	90	30.1	162	54.2	299	100.0		

경제위기 이후 감소하였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 가운데 24.6%로 자녀의 부모 방문 감소 비율(25.2%)과 비슷하였다. 그러나 부모의 자녀 방문 증가 비율은 11.0%로서 자녀의 부모방문 증가 비율(14.5%)보다 낮아 부모의 자녀 방문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결과는 농촌지역사회와 관련하여 몇 가지 함축적인 의미를 갖는다. 우선 부모-자녀의 상호방문에서 방문 빈도가 줄어들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각각 24.6% 대 25.2%)이 비슷했다는 사실은 IMF 경제위기 이후 농촌지역사회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비슷한 수준에서 타격을 받았음을 암시하며, 결국 경제위기의 부정적 효과가 부모-자녀간의 상호방문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논리 설정을 가능하게 해준다. 다음으로 부모-자녀 상호방문에서 부모의 자녀방문 비율(11.0%)이 자녀의 방문증가 비율(14.9%)보다 낮다는 사실은 경제위기가 농촌지역과 농촌주민들에게 보다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는 가정을 가능케 한다. 즉, 경제위기때 따른 농촌경제의 황폐화는 농촌주민의 '외출'을 그만큼 어렵게 만들었을 것이며, 여기에 농촌주민의 노령화 현상은 농촌주민의 자녀방문(외출)을 또한 어렵게 만들었을 것이다.

3) 경제생활 만족도 변화

농촌주민의 경제생활 만족도 변화는 IMF 경제위기 이전에 비해 현재 농촌주민의 경제적 환경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를 비교하여 평가하도록 질문하였다. 농촌주민의 경제생활 만족도 변화를 측정하는데 본 연구는 농촌주민의 부채액의 변화, 저축액의

변화, 가족소득의 변화, 의료보험료 납부에 따른 부담감 변화, 그리고 소비자 물가의 변화 등을 사용하였고, 그 분석결과는 표 5와 같다.

IMF 경제위기 이후 한국사회의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 가운데 하나는 '고금리'에 따른 기업도산과 대량해고 사태였고, 후자는 다시 가족해체를 가속화시켜 사회적 위기감을 조성하였다. 특히 IMF 당국이 강요한 고금리 정책은 경제위기 이전부터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던 농가부채문제를 더욱 심화시켜 농촌사회의 존립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부각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 가운데 과반수 이상인 58.7%가 IMF 경제위기 이후 농가부채의 증가를 경험하였다. 반면에 농가부채가 감소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14.7%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26.7%는 이전과 비슷한 부채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IMF 경제위기 이후 농가부채의 증가를 경험한 사람들 중에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른 사람도 무려 22.0%나 되었다.

다른 한편, 응답자의 저축액과 가족수입은 농가부채의 증가와 대조적으로 크게 하락하였다. 먼저 IMF 경제위기 이후 금융기관에 저축하고 있는 액수가 경제위기 이전보다 증가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단지 8.5%에 불과하였지만, 과반수 이상인 54.4%는 저축규모가 줄어들었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37.2%는 경제위기 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저축액을 유지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지난 2년 동안 가족소득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 가운데 단지 2.6%에 불과하였지만, 가족소득의 감소를 경험한 응답자는 28.9%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리고 응답자의 68.5%는 과거와 비슷한 수준의 가족소득을

표 4. 농촌주민의 가족생활 변화에 대한 평가

평 가 변 수	증가하였다		비슷하다		감소하였다		합 계	
	빈도(N)	비율(%)	빈도(N)	비율(%)	빈도(N)	비율(%)	빈도(N)	비율(%)
부부생활 만족도	45	15.6	179	62.2	64	22.2	288	100.0
자녀의 부모방문	36	14.9	145	59.9	61	25.2	242	100.0
부모의 자녀방문	26	11.0	152	64.4	58	24.6	236	100.0

유지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이 IMF 경제위기 이후 대부분의 농촌주민들은 부채의 증가와 함께 저축액과 가족소득의 감소를 경험하여 경제생활이 크게 악화되었음을 암시해 준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의 농촌주민의 의료보험료 납부 부담감과 소비자 물가 변화 인식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났다. 먼저 경제생활의 변화 정도를 간접적으로 반영하는 의료보험료 납부에 대한 농촌주민의 부담감 변화는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 응답자 가운데 70.2%는 경제위기 이후 의료보험료 납부가 매우 부담스러워졌다고 응답한 반면, 단지 3.7%만이 부담감이 줄어들었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26.1%는 경제위기 이전과 비슷한 정도의 부담감을 갖고 있었다. 이와 같이 농촌주민의 경제생활이 크게 악화된 것은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경제의 소외와 IMF 경제위기의 부정적 효과가 상호작용한데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1960년대부터 시작된 한국 산업화 정책은 농촌지역과 농업의 희생을 기초로 일부 산업도시에 자본과 시설을 집중시켜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데 집중되었다. 그 결과 농촌경제는 상대적으로 저발전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고, 저발전 상태에 놓여있던 농촌경제는 IMF 경제위기의 여파로부터 심각한 영향을 받아 더욱 악화되었다.

다음으로 농촌주민들의 소비자 물가 변화에 대한 인식도 그들의 경제생활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해 주고 있는 듯 하다. 예를 들면, 전체 응답자 가운데 무려 80.5%는 소비자 물가가 지난 2년 동안 크게 올랐

다고 인식한 반면, 단지 5.5%만이 내렸다고 인식하였다. 그리고 14.0%은 소비자 물가에 큰 변화가 없었다고 응답하였다.

이상의 분석결과로부터 우리는 농촌주민들의 경제생활이 지난 2년 동안 매우 악화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우선 가족수입과 저축액이 크게 줄어든 반면, 농가부채는 크게 증가하여 농촌주민의 가족경제 운영을 어렵게 하였고, 가족경제의 어려움은 다시 농촌주민의 의료보험료 납부와 소비자 물가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4) 여가생활 만족도 변화

농촌주민의 여가생활 만족도 변화는 IMF 경제위기 이전과 이후 사이에 농촌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여행비용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 여행에서 얻은 만족감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 그리고 가족 외식비와 노래방 및 다방 출입 빈도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를 중심으로 측정하였고, 그 분석결과는 표 6과 같다.

먼저 IMF 경제위기 이후 농촌주민들의 여행비용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검토하면, 전체 응답자 가운데 과반수에 해당하는 49.0%는 경제위기 이전에 비해 여행경비를 축소시킨 반면, 단지 5.8%만이 여행경비를 보다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머지 45.2%는 경제위기 이전과 비슷한 수준에서 여행경비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행으로부터 얻게 된 만족도는 여행경비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즉 경제위기로 인해 여행경비를 축소시킨 응답자는 49.0%인 데 비해 여행에서 얻은 만족도가 경제위기

표 5. 농촌주민의 경제생활 변화에 대한 평가

변 수	평가		증가하였다		비슷하다		감소하였다		합 계	
	빈도(N)	비율(%)	빈도(N)	비율(%)	빈도(N)	비율(%)	빈도(N)	비율(%)	빈도(N)	비율(%)
부채액의 변화	176	58.7	80	26.7	44	14.7	300	100.0		
저축액의 변화	25	8.5	110	37.2	161	54.4	296	100.0		
소득액의 변화	20	6.7	189	63.4	77	28.9	286	100.0		
의료비 부담감 변화	210	70.2	78	26.1	11	3.7	299	100.0		
소비자 물가의 변화	239	80.5	42	14.1	16	5.5	297	100.0		

이전보다 줄어들었다고 응답한 사람은 33.5%로 약 1/3 정도 낮아졌고, 반대로 여행으로부터 느끼는 만족감이 IMF 경제위기 이전에 비해 증가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 가운데 7.2%로서 여행경비를 축소시킨 사람들(5.8%)보다는 약간 많았다. 그리고 여행 만족감에 커다란 변화가 없었던 응답자도 59.3%로 여행경비에 변화가 없었던 사람들(45.2%)보다 많았다. 이와 같이 경제위기를 맞아 농촌주민들은 생존전략의 차원에서 여가비용 가운데 하나인 여행비를 크게 축소시켰지만 이들의 여행활동 만족감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농촌주민들의 일상생활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즉 힘든 농사일에 묶여 살던 농촌주민들에게 여행은 고된 생활로부터의 탈출을 의미하기 때문에 보다 즐겁고 유쾌한 시간이 될 수 있으며, 그 결과 농촌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여행에서 보다 만족스런 느낌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다른 한편, IMF 경제위기 이후 가족의 외식비용과 노래방 및 다방 출입 변화를 보면, 양자 모두 비슷한 수준에서 악화되었다. 먼저 가족의 외식비용을 증가시켰다고 응답한 사람은 단지 5.8%에 불과한 반면, 가족의 외식비용을 축소시킨 응답자는 41.9%로 매우 많았다. 그리고 과거와 비슷한 수준에서 외식을 즐기고 있는 응답자는 52.3%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IMF 경제위기 이후 노래방 및 다방 출입을 축소시킨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 가운데 46.7%로 나타난 반면, 보다 증가시킨 사람은 3.1%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과거와 비슷한 수준에서 노래방이나 다방을 출입하고 있

는 사람은 50.2%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IMF 경제위기 이후 농촌주민의 여가생활은 크게 위축되었는데, 이런 결과는 위에서 검토하였듯이 경제위기에 따른 농촌주민의 경제생활 악화에서 그 일차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5) 지역사회활동 참여 변화

IMF 경제위기 이후 농촌주민의 지역사회활동 참여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경제위기 이전에 비해 1999년 현재 마을의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빈도 및 면지역의 행사에 참여하는 빈도 등의 '공식 부문' 참여와 이웃의 경사(회갑 및 결혼식)에 참여하는 빈도, 이웃의 애사에 참여하는 빈도, 그리고 문중의 제례와 모임에 참여하는 빈도 등의 '비공식 부문' 참여 변화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도록 응답자들에게 질문하였고, 그 분석결과는 표 7과 같다.

IMF 경제위기 이후 농촌주민들의 마을 행사 참여 정도는 오히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마을 행사에 참여하는 빈도가 경제위기 이전에 비해 증가하였다고 응답한 사람은 74.0%로서 줄어들었다고 응답한 사람의 15.7%보다 무려 5 배정도 많았다. 그리고 경제위기 이전과 비슷한 수준에서 마을의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10.3% 정도였다.

그리고 이웃의 경계를 넘어 광의의 지역사회인 '면' 단위 지역행사에 참여하는 빈도의 변화도 이웃간에 이루어지는 상호방문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먼저 면단위 지역행사에 참여하는 빈도가 증가하였다

표 6. 농촌주민의 여가생활 변화에 대한 평가

평가 변수	증가하였다		비슷하다		감소하였다		합 계	
	빈도(N)	비율(%)	빈도(N)	비율(%)	빈도(N)	비율(%)	빈도(N)	비율(%)
여행비용의 변화	17	5.8	131	45.2	142	49.0	290	100.0
여행만족도 변화	21	7.2	172	59.3	97	33.5	290	100.0
가족의 외식비용 변화	17	5.8	153	52.4	122	41.9	292	100.0
노래방 및 다방 출입의 변화	9	3.1	144	50.2	134	46.7	287	100.0

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 가운데 68.0%로 매우 많았다. 반면에 지역행사에 참여하는 빈도가 줄어들었다고 응답한 사람과 과거와 비슷한 수준에서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각각 15.5%와 16.5%로 비슷하였다.

다음으로 이웃의 경사에 참여하는 빈도가 과거에 비해 증가하였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또한 상당히 높게 나타났는데, 이웃의 회갑과 결혼식에 참여하는 빈도가 증가한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 가운데 68.2%를 차지하였고, 반대로 줄어들었다고 응답한 사람은 단지 13.4%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과거와 비해 커다란 변화가 없이 비슷한 수준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18.4%로 나타났다.

IMF 경제위기 이후 농촌주민들이 이웃의 애사에 참여하는 빈도는 마을행사와 이웃의 경사에 참여하는 빈도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즉 이웃의 애사에 참여하는 빈도가 경제위기 이후 증가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 가운데 87.3%로 농촌주민 대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웃의 애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대로 이웃의 애사에 참여하는 빈도가 줄어든 사람은 단지 4.0%로 매우 적었다. 그리고 나머지 8.7%는 경제위기 이전과 비슷한 수준에서 이웃의 애사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농촌주민들이 IMF 경제위기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웃의 경사보다 애사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까닭은 농촌주민의 이웃관계가 타산적이고 이차적인 관계라기보다 일차적이며, 특히 어려움을 당하여 이웃간에 상부상조하는 관행이 아직도 퇴색하지 않고 지배적인 특징으로 잔존하기 때문이다(송정기·박재규, 2000).

마지막으로 농촌주민들이 경제위기 이전에 비해 문중의 제례 및 모임에 참여하는 빈도는 이웃의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하는 빈도의 변화에 비해 다소 낮았지만,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문중의 제례와 모임에 참여하는 정도가 IMF 경제위기 이후 증가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 가운데 62.7%로 높게 나타난 반면, 줄어든 사람도 또한 22.4%로 비교적 많은 편이다. 그리고 과거와 비슷한 수준에서 문중의 제례와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은 14.8%로 가장 적었다.

이상과 같이 농촌주민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는 IMF 경제위기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그 동안 한국 농촌지역사회가 유지해 왔던 전통적인 사회관계, 즉 '일차적인 유대관계와 협력관계, 그리고 지리적인 인접성에 따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7. 농촌주민의 지역사회활동 변화에 대한 평가

변 수	평가		증가하였다		비슷하다		감소하였다		합 계	
	빈도(N)	비율(%)	빈도(N)	비율(%)	빈도(N)	비율(%)	빈도(N)	비율(%)	빈도(N)	비율(%)
마을행사(회의)에 참여 빈도	222	74.0	31	10.3	47	15.7	300	100.0		
'면' 지역의 행사에 참여하는 빈도	202	68.0	49	16.5	46	15.5	297	100.0		
이웃의 회갑/경사에 참여하는 빈도	204	68.2	55	18.4	40	13.4	299	100.0		
이웃의 애사에 참여하는 빈도	261	87.3	26	8.7	12	4.0	299	100.0		
문중의 제례/ 모임에 참여하는 빈도	182	62.7	43	14.8	65	22.4	290	100.0		

6) 사회적 형평성 인식 변화

사회적 형평성은 분배의 정의, 사회구성원의 상대적 박탈감과 불만, 그리고 사회적 통합 정도를 반영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인간의 주관적인 삶의 질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영역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사회적 형평성 인식 변화를 농촌주민의 삶의 질(일상생활) 변화를 반영하는 중심적으로도 포함시켰다. 농촌주민의 사회적 형평성 인식은 농촌주민의 거주공간인 마을이나 면 단위의 경계를 넘어 한국사회 전체를 준거점으로 설정한 다음 IMF 경제위기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를 농촌주민들로 하여금 주관적으로 평가하도록 질문하였다. 본 연구의 '사회적 형평성 인식' 내용은 우리사회의 빈부격차의 심화 정도, 우리사회의 빈곤문제의 심화 정도, 우리사회의 실업문제의 심화 정도, 그리고 농촌사회의 부채 악화 상황 등이 지난 2년 동안 어느 정도 변하였는지를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며, 그 분석 결과는 표 8과 같다.

먼저 IMF 경제위기 이후 우리사회의 빈부격차 심화에 대한 농촌주민들의 평가를 살펴보면 그 결과는 매우 비관적이다. 즉, 전체 응답자 가운데 단지 4.3%만이 지난 2년 사이에 우리사회의 빈부격차가 줄어들었다고 응답하였고, 여기에 과거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응답한 사람(16.8%)을 합해도 약 20% 정도만이 IMF 경제위기가 한국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반면에 응답자의 약 80%는 지난 2년 동안 우리사회의 빈부격차가 크게 악화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물론 이런 결과는 농촌주민의 경제생활 만족도 변화에서 드러났듯이 농촌주민 대다수가 소득감소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

실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경제위기에 따른 '중산층의 붕괴'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심화에 따른 사회적 위기의식의 확산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농촌주민들은 IMF 경제위기 이후 우리사회의 빈곤문제도 빈부격차 악화만큼이나 심화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즉 전체 응답자 가운데 77.8%는 우리사회의 빈곤문제가 IMF 경제위기 이후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반면, 단지 4.8%만이 빈곤문제가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17.4%는 우리사회의 빈곤문제가 과거에 비해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실업문제 또한 빈부격차 및 빈곤문제와 비슷한 수준에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 응답자 가운데 76.2%는 IMF 경제위기 이후 우리사회의 실업문제가 매우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반면, 단지 6.5%만이 실업문제가 다소 줄어들었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17.3%는 과거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인식하였다.

마지막으로 농촌주민들의 농가부채 문제는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 응답자 가운데 82.3%는 IMF 경제위기 이후 농촌주민들의 부채가 크게 증가하였다고 인식하였다. 반면에 전체 응답자 가운데 단지 4.4%만이 농가부채가 다소 줄어들었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13.3%는 농촌의 부채 문제가 과거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인식하였다.

이상과 같이 농촌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사회적 형평성은 종합적으로 IMF 경제위기 이후 가장 심하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바로 IMF 경제위기로부터 파생된 사회적 위기감을 농촌주민들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촌주민들 스

표 8. 농촌주민의 사회적 형평성 인식 변화에 대한 평가

평 가 변 수	증가하였다		비슷하다		감소하였다		합 계	
	빈도(N)	비율(%)	빈도(N)	비율(%)	빈도(N)	비율(%)	빈도(N)	비율(%)
빈부격차의 심각성	234	78.8	40	16.8	13	4.3	297	100.0
빈곤문제의 심각성	228	77.8	51	17.4	14	4.8	293	100.0
실업문제의 심각성	224	76.2	51	17.3	19	6.5	294	100.0
농촌부채의 심각성	241	82.3	39	13.3	13	4.4	293	100.0

스로가 몸소 체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경제위기 이후 기업도산과 정부기관 및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직 사태와 고용축소, 그리고 고금리 정책에 따른 부채규모의 급증과 부채상환의 불능사태는 일부 가족의 해체를 가속화시켜 급기야 한국사회를 '위기국면'으로 몰아갔다(김영기·박재규, 1999; 신광영·이성균, 2000). 사회적 위기감과 농촌지역의 사회-경제적 환경 악화 속에서 농촌주민들이 사회적 형평성을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7) 국가신뢰도의 인식 변화

사회적 형평성과 마찬가지로 농촌주민의 국가(사회)신뢰에 대한 인식 평가도 상대적 발달감과 사회적 불만, 그리고 사회적 소외감 정도를 반영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농촌주민의 주관적인 삶의 질 영역으로 포함시켰다. 본 연구에서 농촌주민의 국가신뢰의 인식 평가는 농촌지역의 발전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예산할당 정도, 그리고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 능력(노력)에 대한 믿음의 변화를 중심으로 구성하였고, 그 분석결과는 표 9와 같다.

IMF 경제위기 이후 정부의 농촌지역 발전에 대한 관심과 농촌지역발전을 위한 예산할당 정도에 대한 농촌주민들의 주관적인 평가를 검토해 보면, 두 영역에서 거의 비슷하게 부정적이었다. 먼저 지난 2년 동안 농촌지역 발전에 대한 정부의 관심 변화를 보면,

전체 응답자 가운데 과반수 이상인 54.8%는 정부의 관심이 줄어들었다고 평가하였다. 정부의 농촌지역 발전에 대한 농촌주민들의 부정적 평가는 농촌경제의 지속적인 배제와 저발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노력이 도시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 해결에만 집중되면서 농촌주민들의 소외감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반면에 응답자의 17.3%만이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농촌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27.9%는 과거에 비해 커다란 변화가 없었다고 평가하였는데, 이런 중립적인 평가는 오히려 부정적인 평가로 간주해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정부의 농촌지역 발전에 대한 배제전략으로 농촌지역주민 대부분은 정부의 농촌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관심과 정부 당국의 노력을 쉽게 신뢰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인식 결과는 지난 2년 동안 정부의 예산이 농촌지역발전을 위해 어느 정도 할당되었는가라는 질문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54.1%는 농촌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정부의 예산배정이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평가한 반면, 19.5%는 증가하였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26.4%는 과거와 비슷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정부의 농촌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 할당에 대한 평가와 마찬가지로 한국사회가 직면한 현재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능력(노력)에 대한 농촌주민들의 평가도 매우 부정적이다. 다시 말해서, IMF

표 9. 농촌주민의 '국가신뢰'에 대한 평가

평 가 변 수	증가하였다		비슷하다		감소하였다		합 계	
	빈도(N)	비율(%)	빈도(N)	비율(%)	빈도(N)	비율(%)	빈도(N)	비율(%)
농촌지역발전에 대한 정부의 관심	51	17.3	82	27.9	161	54.8	294	100.0
농촌발전을 위한 정부의 예산 할당	57	19.5	77	26.4	158	54.1	292	100.0
농촌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 믿음	72	28.2	89	30.8	118	41.0	288	100.0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	30	10.3	200	68.7	61	21.0	291	100.0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정부의 능력과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단지 10.3%에 불과한 반면, 나머지 89.7%는 정부의 노력을 부정적이거나 혹은 신뢰하지 않고 있었다. 이들 가운데 21.0%는 정부의 노력이 이전에 비해 다소 감퇴하였다고 평가하였으며, 그리고 68.7%는 과거에 비해 별로 변화된 것이 없었다고 응답하였다.

이상과 같이 정부의 농촌지역발전을 위한 관심과 실제적인 예산 할당, 그리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정부의 능력과 노력에 대한 농촌주민의 평가는 비교적 부정적이었다. 이처럼 정부의 농촌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및 노력에 대한 농촌주민들의 부정적 평가는 그동안 한국 농촌지역의 저발전이 정부의 관심과 예산지원의 배제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1960년대 산업화과정에서 정부는 도시-편향적, 특정 지역 편향적인 지역발전을 추진해 왔고, 그 결과는 도시-농촌간, 그리고 영남-호남간 지역불균형 성장으로 고착화되면서 지역감정을 심화시켰다(김영정, 1997). 이와 같이 농촌지역의 저발전 상황은 1997년 말부터 시작된 IMF 경제위기와 맞물리면서 농촌지역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고, 이런 악화된 상황에서 농촌주민들은 현정부의 농촌지역발전을 위한 노력 및 가시적 효과를 그 어디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농촌지역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1997년 후반부터 시작된 한국사회의 경제위기 하에서 농촌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경험적인 자료분석을 통해 논의하였다. 자료분석 결과에 의하면, 농촌지역주민들은 7가지 삶의 질 내용 가운데 지역사회활동 참여 영역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을 뿐 나머지 6개의 내용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먼저 'IMF 경제위기'에 따른 사회-경제적 어려움과 일반적인 지역사회 변화에도 불구하고 농촌주민들이 지역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은 농촌지역공동체의 특성인 '주민들

간의 일차적인 유대관계와 상부상조' 관행이 농촌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장년·노년층을 중심으로 강하게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활동 참여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삶의 질 내용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IMF 경제위기 이전에 비해 크게 악화되었다. 6가지 영역 가운데 가장 심하게 악화된 영역은 한국 사회의 '사회적 형평성 인식' 부문이다. 이처럼 농촌주민들의 사회적 형평성 인식이 크게 악화된 것은 사회적 형평성 다음으로 심하게 악화된 농촌주민의 '경제생활'에서 그 일차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다음으로 경제위기 이후 한국사회가 겪었던 '중산층의 붕괴' 및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심화에 따른 사회적 위기 의식 확산, 그리고 부실기업과 도시 실직자에 대한 막대한 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농가에 대한 지원 부재 등 '상대적 박탈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농촌주민의 경제생활 다음으로 악화된 영역은 여가생활 영역이었다. 여가생활의 악화는 경제생활 악화에 따른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즉, 경제위기 이후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농촌주민들은 생존전략의 하나로 소비(지출)를 축소하게 되는데, 경제활동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여가부문의 지출이 일차적인 축소 대상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생활 다음으로 농촌주민의 여가생활이 악화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다음으로 악화된 영역은 직업생활과 국가(사회)신뢰 부문이었다. 농촌주민의 직업생활 악화와 국가(사회)신뢰 악화는 농촌지역의 저발전 상태와 'IMF 경제위기'라는 외적 충격간의 상호작용으로 볼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정책으로 배제되어 저발전 상태에 빠져 있던 농촌지역사회는 경제위기와 함께 그 하부구조가 송두리째 해체되는 아픔을 경험하였다(김정주, 1998). 농촌지역의 사회-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계속해서 도시 지역 문제(특히 실직자와 빈민층 지원) 해결에 자원과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농촌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더욱 소외감을 느끼게 되었고, 그 결과 농사일과 관련된 직업생활과 국가(사회)의 정책과

능력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농촌주민의 가족생활은 다른 영역에 비하면 비교적 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비록 경제위기 이전에 비해 가족생활이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사람보다 다소 많았지만, 그 차이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이런 결과는 농촌지역의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이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생활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더욱이 가족구성원간의 관계가 일차적이며 강한 연대를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분석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농촌주민들의 일상생활은 지역사회활동 참여를 제외한 직업생활, 가족생활, 경제생활, 여가생활, 사회적 형평성 인식, 국가(사회)신뢰 모두에서 상당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의 함의를 토대로 본 연구는, 비록 연구결과가 한국의 농촌사회 전체를 일반화시키는데 한계가 있을지라도, 농촌지역사회 발전과 농촌주민들의 일상생활(삶의 질) 개선을 위한 몇 가지 대안을 모색·제시하였다.

첫째, 농촌주민의 삶의 질 변화 가운데 가장 악화된 내용은 '사회적 형평성' 부문이었다. 이런 결과는 한국의 산업화과정에 의한 농촌지역의 저발전 현상과 IMF 경제위기기간의 상호작용 효과에 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농촌지역은 1960년대 이후 한국 산업화과정에서 정책적으로 배제되어 저발전 상태를 면치 못하였고, 여기에 1997년 후반 시작된 IMF 경제위기는 영농비의 급증과 그에 따른 농가의 소득감소와 연쇄파산 사태 등을 야기하여 농촌주민의 일상생활 자체를 크게 악화시켰다. 그런 의미에서 농촌주민의 영농의욕을 고양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농어촌 발전전략'이 요구된다. 과거 정부는 농어촌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을 추진하였지만, 그 사업은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평가이다(황만길, 2000). 따라서 정부는 2단계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과거 사업의 문제점을 검토한 다음 사업자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타당성을 확보하는 한편 사업에 대한 평가 및 사후 지원·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밖에도 정부는 농가소득의

최적 수준을 보장하는 동시에 농촌경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직접지불제도의 조기 도입, 농업재해 보상 제도 강화, 농축산물 가격 대책 수립, 그리고 유통구조의 개혁 등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IMF 경제위기 이후 사회적 형평성 인식 다음으로 농촌주민의 경제생활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주민의 경제생활 악화는 가족소득 감소와 저축액 및 부채액의 증가, 그리고 그에 따른 경제생활 압박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IMF 경제위기에 따른 환율상승은 수입 원자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유류, 비료, 사료 등 농자재 가격의 폭등을 초래하였고, 후자는 농촌주민의 경제생활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농촌주민의 영농의욕을 높이고, 농촌지역사회의 안정화를 위해서 정부는 농자재 가격을 특별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는 농업의 경제 외적 가치인 '식량안보'와 같은 공익적 기능을 고려하여 농업을 안정화시키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농촌경제 회생정책'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경제생활 악화와 관련하여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IMF의 한국경제 개입 이후 '고금리 정책'에 따른 농촌지역의 부채증가와 연대보증이 농가의 연쇄적 파산과 농촌사회의 존립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는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는 농가의 연쇄파산을 막을 수 있는 '농가부채 특별법', '농업금융제도'의 개혁, 연체자의 감면 등과 같은 특단의 조치를 한시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농촌주민의 사회적 형평성 인식이나 경제생활 및 직업생활의 악화는 궁극적으로 정부의 정책적 오류에서 비롯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정부의 과잉생산 유도와 부적절한 시설투자 권유는 농가의 소득증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농가부채만 누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기 때문이다. 그런 맥락에서 정부는 농정실패와 IMF 경제위기 하에서 농촌주민의 삶의 질 하락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며(박성재, 2000), 농가부채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최근 정부는 농가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저금리정책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농촌지역에서 연대보증인을

구하지 못하여 자금을 지원 받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였다고 한다. 왜냐하면 많은 농촌주민들은 이웃의 금융대출에 보증을 서주었다가 IMF 경제위기와 함께 낭패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보증을 서지 않겠다고 한다(송정기·박재규, 2000). 결국 연대보증에 따른 부작용 문제가 IMF 경제위기를 통하여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정부는 연대보증인 제도를 개혁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주

- 1) 에반스가 제시하고 있는 삶의 질 영역은 결혼만족, 직업만족, 재정만족, 지역사회만족, 결혼적응, 종교적 만족, 가족생활의 질, 가족의 복지 등 8가지 부문이었다(Evans, 1994).
- 2) 최근에 중소도시와 주변지역에서 이루어진 조사결과에서도 응답자의 월 평균 소득은 142만원으로 연간 소득으로 환산하면 약 1700만원 정도였다(김영기·신환철·이주재, 2000). 본 연구의 사례지역이 시설농가를 포함한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다소 높다고 하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아 일반화시키는 데 큰 문제가 없을 듯하다.

참고문헌

1. 강정일 외(1998), 『IMF 관리체제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김군수(1997), "지방화와 삶의 질," 설봉식 외, 『지방자치의 경영학』, 선학사.
3. 김동일 외(1978), 『한국 농촌주민의 삶의 질: 사회지표 구성을 위한 종합적 접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 김동일·나영선(1994), "재촌탈농 및 겸업화에 대비한 직업훈련의 필요성과 실시방안," 한국농촌사회학회, 『UR 이후 한국 농촌사회의 변화와 대응』: 106~128.
5. 김병관·박준식(1995), "삶의 질 연구의 필요성

- 과 기존연구의 검토," 연세대, 사회발전연구 창간호: 11~24.
6. 김영기·박재규(1997), "직업과 생활기회에 관한 연구: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20권: 129~159.
7. _____ (2000), "IMF관리체제 하에서 실직가능성과 삶의 질 변화," 『보건과 사회과학』 6·7: 71~112.
8. 김영기·윤근섭(1990), "농촌가구의 이출과 적응에 관한 연구," 전북대 농촌사회발전연구소, 『농촌사회연구』, 창간호: 33~94.
9. 김정주(1998), "총체적 경제위기와 우리나라 농업의 대응," 월간양계 2: 75~82.
10. 김태현·정환영(1999), "시도별 장래 인구추계," 한국인구학 22(1): 175~215.
11. 송복 외(1996), "한국 근로자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보고서.
12. 송정기·박재규(2000), "IMF 경제위기 하에서 기업농과 일반농의 삶의 질 변화 비교연구," 한국농촌사회학회 2000년도 정기학술대회 발표집.
13. 박경태 외(1996),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위한 양적 지표들의 재검토,"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사회발전연구』, 창간호: 25106.
14. 박성재(2000), "중장기 농가부채 대책방향,"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 농가부채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발표집.
15. 박재규(1998), "한국의 발전위기와 국가-시장체제의 전환," 한국비교사회연구회 편, 『동아시아 성공과 좌절』, p. 287~333.
16. 윤근섭·송정기(1994), "농촌지역사회의 인구변화와 대응-과소지역의 구조특성과 변화를 단서로-," 농촌사회학회, 『UR 이후 한국 농촌사회의 변화와 대응』: 31~57.
17. _____ (1998), "농촌마을의 활성화와 지역통합의 과제: 문화적 접근," 『대산논총』 제6집: 571~587.
18. 윤종주(1974), 『농촌인구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 출판부.
19. _____ (1983), "한국사회의 사회지표개발을 위

- 한 기초연구,” 『한국의 인구변동과 사회발전II』, 서울여자대학교, p. 807~902.
20. 이은진(1996), “산업화와 삶의 질: 마산과 창원 시 사례연구,” 제1회 경인지역 사회과학 공동 학술대회 발표집, 경인지역의 산업화와 삶의 질.
21. 이현송(1997), “한국인의 삶의 질-객관적 차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1(여름호): 269~301.
22. 임희섭(1996), “삶의 질의 개념적 논의,” 『한국행정연구』, 5(1, 봄호): 5~18.
23. 주학중·김경동(1984), “국민문화지표 설정을 위한 사회지표론적 모색,” 『정신문화연구』, 봄호.
24. 황만길(2000), “농가부채실태와 해결방안,” 전북 농업인단체연합회, 농가부채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발표집.
25. 통계청(1995), 『OECD 내에서의 한국의 부문별 위상 비교』.
26. 한국개발연구원(1987), 『우리나라 사회지표의 체계개선』, 한국개발연구원.
27. Baldwin, et al.(1990), *Quality of Life: Perspective and Policies*, London: Routledge.
28. Bauer, R. A. ed.(1966), *Social Indicators*, Cambridge: MIT Press.
29. Brenner, M. H.(1987), “Economic Change, Alcohol Consumption and Heart Disease Mortality in Nine Industrialized Countries,” *Social Science and Medicine* 25(2): 119~132.
30. Choo, Hakchung(1979), “Social Indicators: Definition, Purposes and Development,” in *ESCAP Measuring the Social Impact of Population Trends and Development*.
31. Coser, Lewis(1971), *Masters of Sociological Thought*,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32. Davis, E. and Fine-Davis(1991), “Social Indicators of Living condition in Ireland with European Comparisons,” *Social Indicators Research* 25: iii~365.
33. Doh, C. Shin, et al.(1983), “Environmental Effects on Perceptions of Life Quality in Korea,” *Social Indicators* 12: 393~416.
34. Dukheim, Emile(1951), *Suicide: A Study of Sociology*, New York: Free Press.
35. Erikson, Kai T.(1976), *Everything in Its Path: Destruction of Community in the Buffalo Creek Flood*, New York: Simon and Schuster.
36. Evans, D. R.(1994), “Enhancing Quality of Life in the Population at Large,” *Social Indicators Research* 33(1-3).
37. Graves, N. B. and T. D. Graves(1973), “Adaptive Strategies in Urban Migration,”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3.
38. Green, Sarah C.(1978), “Migrant Adjustment in Seoul, Korea: Employment and Housing,”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12(1): 63~75.
39. Inkeles, Alex(1993), “Industrialization, Modernization and the Quality of Life,”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Sociology*, 1-2: 1~23.
40. Johnston, Dennis F.(1988), “Toward a Comparative Quality of Life Index,” *Social Indicators Research*, 20: 478~496.
41. Lin, Nan(1991), “Quality of Life in Urban China: A Model and Data from Shanghai,” in *The Chinese and Their Future: Beijing, Taipei, and Hong Kong*(MIMEO).
42. Jones, Robert A.(1987), *Emile Durkheim: An Introduction to Four Major Works*,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s.
43. Prince, S. H.(1920), *Catastrophe and Social Chang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44. Zapf, Wolfgang(1987), “German Social Report,”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 19.